野, 김병준 철회→탈당·2선 후퇴→거국 내각→별도 특검

'최순실 정국' 여야 수습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를 '최순실 정국'의 분수 령으로 보고 사태 수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에 이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 2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좀처럼 민심의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자 추가적 인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일단 박 대통령은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를 거부 하는 야권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노력에 나서는 한 편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만나 조언 을 구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진정성이 없어 수 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57.2%를 기록했지만 '미 흡하나 수용한다'는 응답은 28.6%, '대국민 사과로 받아 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9.8%로 집계됐 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심의 분노가 크지만 사과를 수용한다는 응답도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카드를 제시한다면 헌정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 실현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장소 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영수회담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에서 빠진 '책임총리 보장'과 '탈당' 의사를 직접 밝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가 끝내 받아들 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 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거국중립 내각을 與 일단 '김병준 카드' 설득 나설 듯 박 대통령, 영수회담 성사에 총력

야권, 12일 기점 장외행동 공식화

구성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오 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쓸 것"이라며 "이번 주에 이번 사태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12일 광화문 집회에서 또 다시 수십만 명의인파가 몰릴 경우, 국정 동력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여전히 초강경 태세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개인 문제로 치부한 데다 계속 국 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격 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 특검, 국회 국정조사,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및 국회추천 총리 수용과 2선 퇴진이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 하겠다는 '조건부 단계적 퇴진론'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보고대회 형식으로 장외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과 여야 3당 대표의 합의를 통한 총리 임명, 거국중립 내각 구성 등을 정국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이 같은 요구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민심대로 하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병우에 쏠린 눈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호남 지지율 0%…부정평가 93% 응답 105명 중 지지자 1명도 없어

박 대통령 지지율 5%…역대 최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 정 지지도가 5%까지 떨어지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5%였다고 4일 밝혔다.

전주(17%)에 비해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 9월 둘째 주(33%)이후 7주 연속 하락곡선을 그린 것이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나 수직상승한 89%를 기록했으며, 나머 지 6%는 '모름·응답 거절'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13년 취임 초기 인사 난맥을 겪으며 40% 선에 머물다가 그해 5월 초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그해 9월 둘째 주에는 67%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하면서 4주연속 본인의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과거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1년차 2,3분기에 83%에 달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맞았던 5년차 4분기에 6%로 하락했다"면서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

통령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2%였고, 대구·경북(TK)은 10%로 비교적 높았으나 호남 지지율은 0%였다. 실제 갤럽의 상세 조사표를 보면 호남지역 응답자 105명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0명으로 나타나 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1%에 그쳤고,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60대 이상도 13%에 불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 (49%)을 가장 크게 꼽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않다'(13%), '소통 미흡'(6%), '리더십 부족·책임회피'(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8%와 13%를 기로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지지도 18%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갤럽은 밝혔다. 당명 변경 전인 '한나라당' 시절 기준으로는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1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 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TK지역 새누리 탈당 행렬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새누리당의 지지기 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당 사무실은 물론 개별 당협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에 탈당절차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핵심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심상치 않은이탈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다.

특히 보수여당의 '텃밭'인 영남권, 그중에서도 박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TK)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수도권은 더욱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한 서울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 방송이 나간 이후에는 몇 시간 동안 지역 사무실 전화선을 빼놔야 할 지경이었다"고 전했고, 한 경기권의원 측은 "본인들의 탈당에 그치는 게 아니라의원도 탈당할 것을 요구하는 당원들도 상당수여서

다독이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건은 이같은 탈당 문의가 실제 얼마나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다.

통상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를 전후로 무더기 입·탈당이 이뤄지곤 한다. 입 후보자들의 독려로 선거 직전 대거 가입했다가, 선 거 후 당비 납부 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탈당하는 게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도당별로 월평균 두자릿 수 단 위의 탈당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적으로 집계된 주 평균 탈당자수는 100여명 안팎으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영남권의 한 지역 단위에서는 지난 한주 통 상적인 수준의 2배에 이르는 탈당계가 제출됐다는 소 식도 전해지면서 '탈당'도미노'의 그림자가 점차 짙 어지는 모습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